

# CBWF 이슈페이퍼

발행인 | 박혜경    발행일 | 2023. 8. 30.    발행처 | (재)충북여성재단

## 충북도내 사업체 규모별 일·생활균형제도 활용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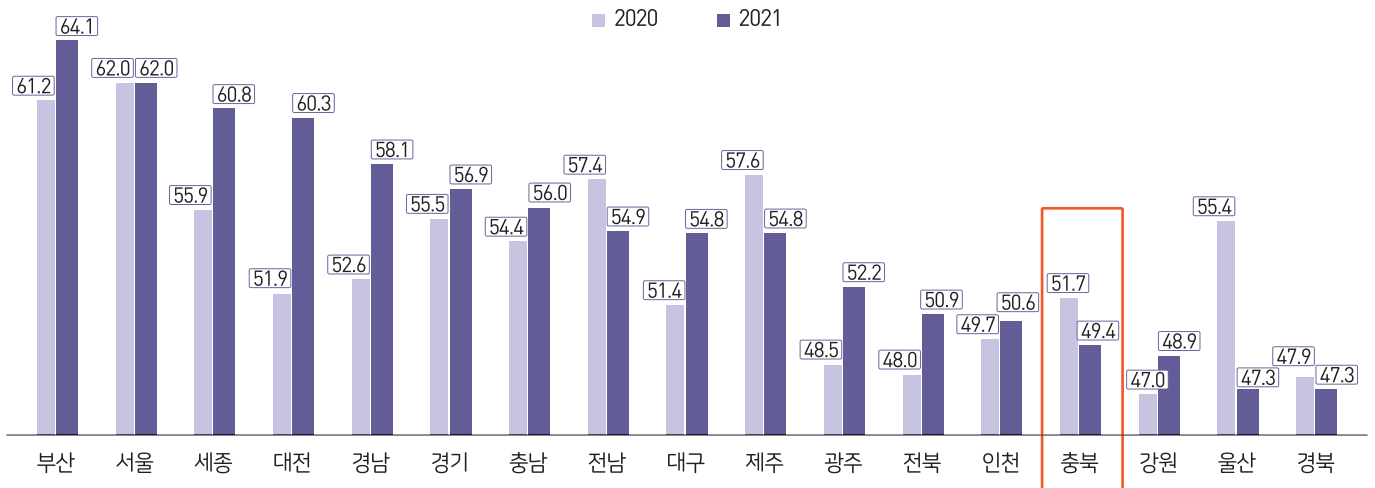
황경란    충북여성재단 연구위원

- 일·생활 균형 제도는 코로나19 이후 더욱 중요해졌으나, 사업체 종사자 규모별로 제도 도입 및 활용에 있어서 격차가 발생하여 중소기업 중심의 일·생활 균형 제도 도입 및 활용을 위한 지원이 요구됨
- 이에 본 이슈페이퍼에서는 충청북도내 위치한 사업체들의 일·생활 균형 제도에 대한 인지도 차이 및 활용 수준을 종사자 규모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중소기업 일·생활 균형제도 활용 현황을 파악하여 지원이 필요한 영역을 점검하고자 함

### 1. 충청북도 일·생활균형지수

- 충북의 일·생활 균형지수는 매년 하락하여, 2021년 전국 하위권(17개 시·도 중 14번째)에 위치함
  - 충북의 일·생활 균형 지수는 2019년 52.3점, 2020년 51.7점, 2021년 49.4점으로 매년 하락하여 각 년별 전국 평균의 상승세와 대비됨(고용노동부 보도자료, 2020.12.31.; 2021.12.31.; 2023.1.11.)
  - 2021년 충북의 일·생활균형지수는 전국 평균(54.7점)보다 5.3점 낮은 49.4점이며, 17개 시·도 중 14위(2020년 11위)로 하위권에 위치함

**일·생활균형지수** 일과 생활시간의 균형 정도(Work and Life Balance)를 측정하기 위해 2017년 고용노동부가 고안한 지표를 토대로 산출되는 수치임. 크게 일, 생활, 제도, 지자체의 관심도라는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됨



자료 : 전기택 외(2022), 『2021년 지역별 일·생활 균형 지수 산출』을 토대로 구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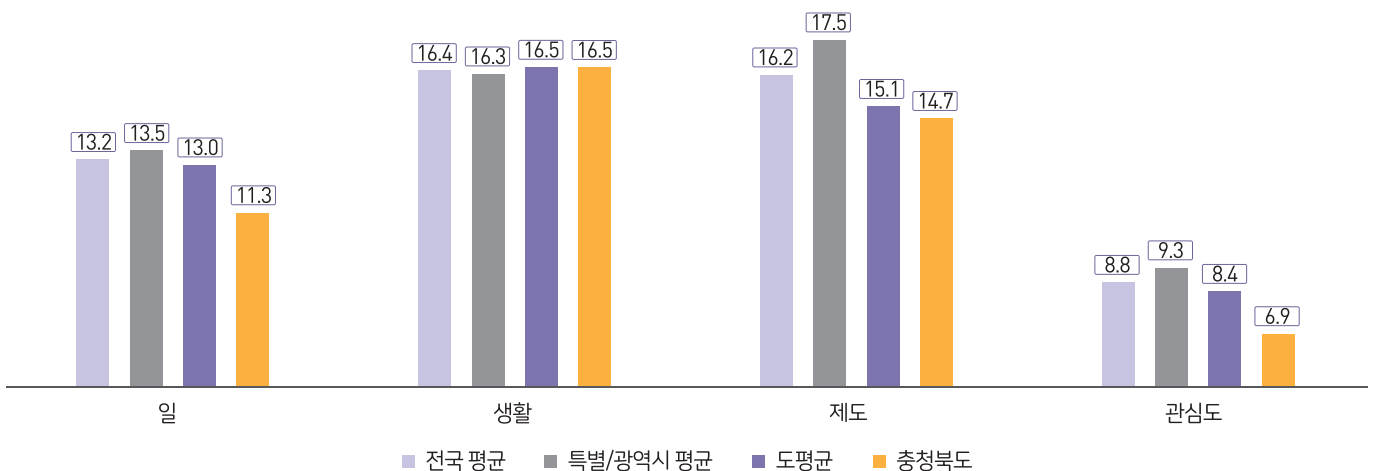
[그림 1] 2020년, 2021년 17개 시·도별 일·생활 균형 지수(점)

- 2021년 충북은 생활 영역(16.5점)을 제외한 일·생활균형 지표의 모든 영역에서 전국·특별/광역시·도 평균 이하로 확인됨

[표 1] 일·생활균형제도 영역별 지표구성(2019년 기준)

영역	지표 구성
일	- 총근로시간, 초과근로시간, 휴가 기간(최근 1년), 유연근무제도 도입률·이용률
생활	- 남성 가사노동시간 비중, 여성취업에 대한 견해,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, 일과 가족생활 우선도, 여가시간 및 충분도(평일), 일·여가생활 균형 정도
제도	- 여성·남성 육아휴직 이용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,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, 국공립보육시설 설치비율, 초등돌봄교실 이용률, 일·가정 양립제도 인지도
지자체 관심도	- 일·생활 균형 조례 유무, 지자체의 홍보(일·생활 균형 제도), 담당조직 유무, 관련 교육 컨설팅, 지역사회 가족문화 관련 시설 현황

자료 : 전기택 외(2022:16), 『2021년 지역별 일·생활 균형 지수 산출』을 토대로 구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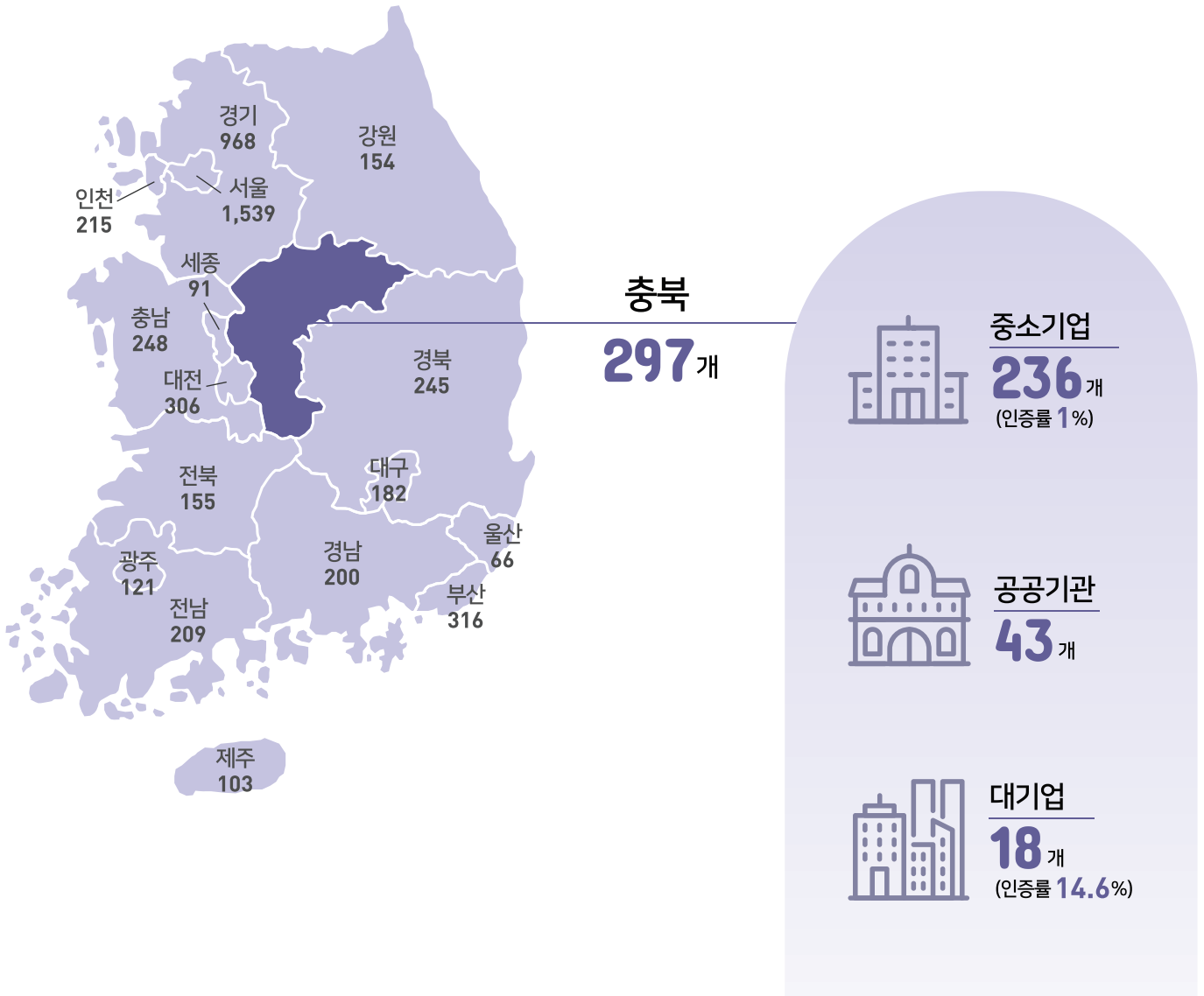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전기택 외(2022), 『2021년 지역별 일·생활 균형 지수 산출』을 토대로 구성

[그림 2] 영역별 일·생활 균형 지수 비교 : 전국, 특별/광역시 평균, 충청북도(점)

## 2. 충북도내 가족친화인증기업 현황

- 충북도내에 위치한 사업체 중 총 297개가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은 것으로 확인됨
  - 중소기업이 236개로 충북도내 중소기업 중 1%, 대기업이 18개로 충북도내 대기업 중 14.6%가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됨
  - 충북의 가족친화인증기업 현황을 인근 지역과 비교 시, 대전보다는 9개 적고, 충남보다는 49개 많음



자료 :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<https://www.ffsb.kr/ffm/ffmCertBusiGuide.do>를 토대로 재구성

[그림 3] 지역별 가족친화인증 기업 현황(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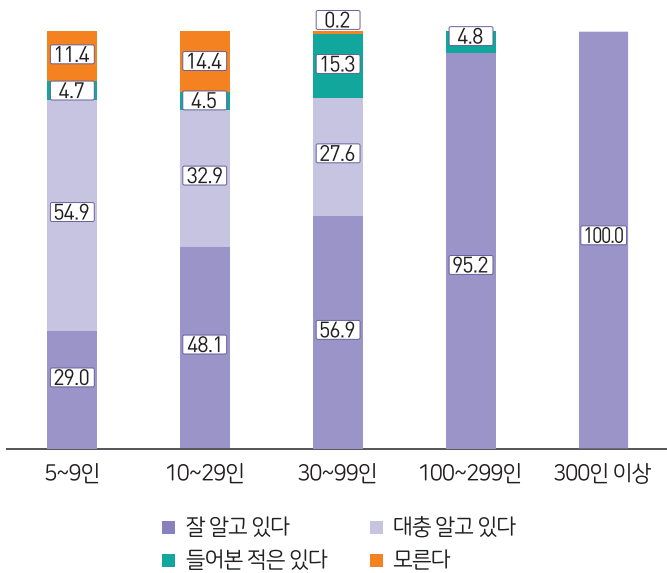
**가족친화제도** 「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3항에 따라 노동자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일과 가정생활을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를 말함. '탄력적 근무제도, 자녀의 출산 양육 및 교육지원제도, 부양가족 지원제도, 근로자 지원제도, 기타 가족관계 증진 및 가족 여가문화 촉진, 가족친화 사회공헌 제도'가 포함됨

### 3. 충북 사업체 규모별 일·생활 균형제도 활용 현황

#### 1) 사업체 규모별 일·가정 양립 제도 활용 정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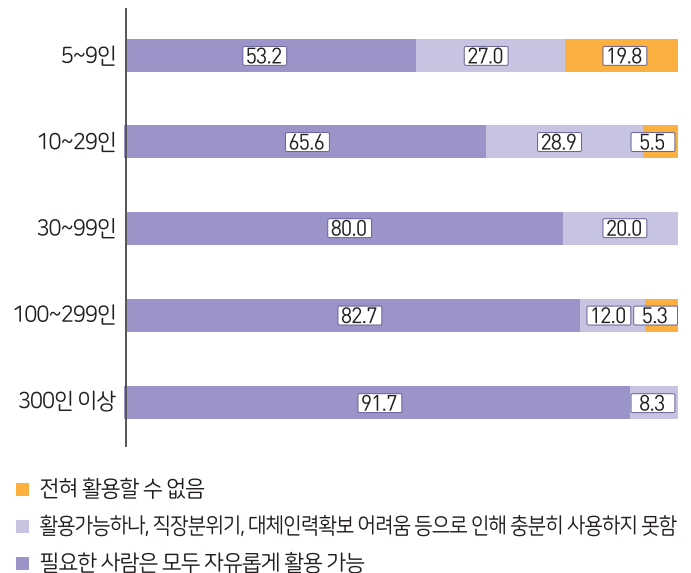
##### (1) 충북 사업체 규모별 출산전후휴가제도 활용

- 충북 사업체 규모별 출산전후휴가제도 인지도와 활용 가능 정도를 확인한 결과,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출산전후휴가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고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됨
  - 출산전후휴가제도에 대해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95% 이상 '잘 알고 있다'고 응답한 반면, 1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'대충 알고 있다'는 응답이 54.9%로 가장 많았으며,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모른다는 응답도 도출되어(5~9인 11.4%, 10~29인 14.4%) 사업체 규모에 따른 인지도 격차가 큰 편임
  - 출산전후휴가제도 활용과 관련하여, 전반적으로 '필요한 사람은 모두 자유롭게 활용 가능'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, 5~9인 사업체에서는 '전혀 활용할 수 없다'는 응답도 약 20%로 나타남



자료 : 2021년 일·가정양립실태조사(2022). 원자료 분석.

[그림 4] 2021 충북 사업체 규모별 출산전후휴가제도 인지도(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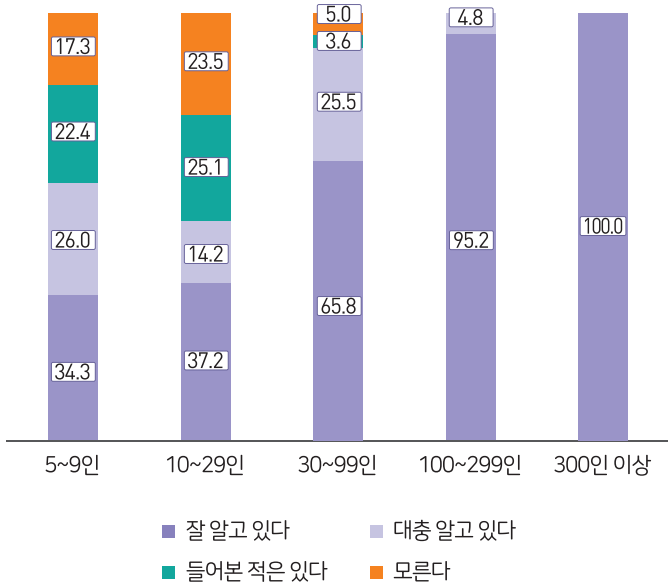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2021년 일·가정양립실태조사(2022). 원자료 분석.

[그림 5] 2021 충북 사업체 규모별 출산전후휴가제도 활용가능 정도(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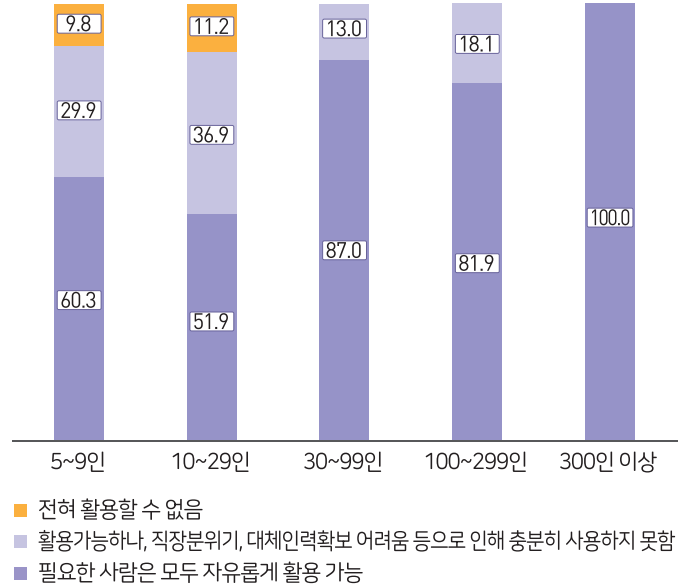
##### (2) 충북 사업체 규모별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활용

- 충북 사업체 규모별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활용 정도를 확인한 결과,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해당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고, 30인 이상 규모의 사업체에서는 '필요한 사람은 모두 자유롭게 활용 가능'하다는 응답이 80% 이상인 것으로 확인됨
  - 100인 미만 사업체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제도에 대해 '들어본 적은 있다', '모른다'는 응답이 확인되었으며, 10인~29인 사업체의 경우 다른 규모의 사업체들에 비해 '들어본 적은 있다'는 응답이 25.1%, '모른다'는 응답이 23.5%로 가장 많았음



자료 : 2021년 일·가정양립실태조사(2022). 원자료 분석.

[그림 6] 2021 충북 사업체 규모별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인지도(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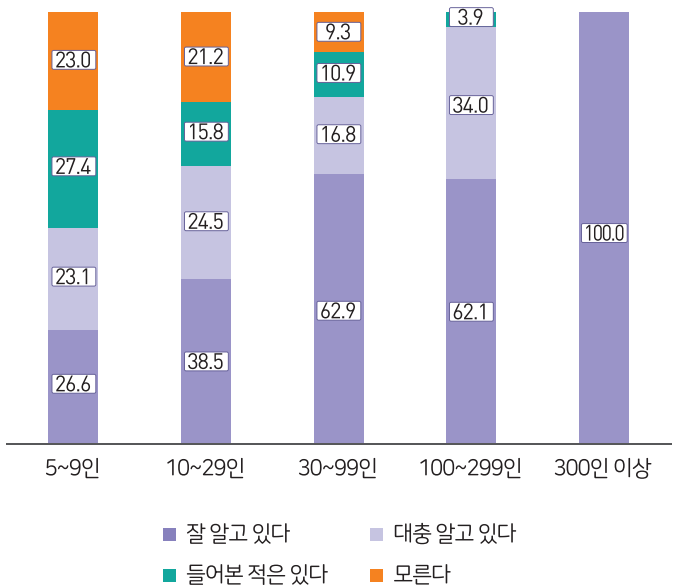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2021년 일·가정양립실태조사(2022). 원자료 분석.

[그림 7] 2021 충북 사업체 규모별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활용가능 정도(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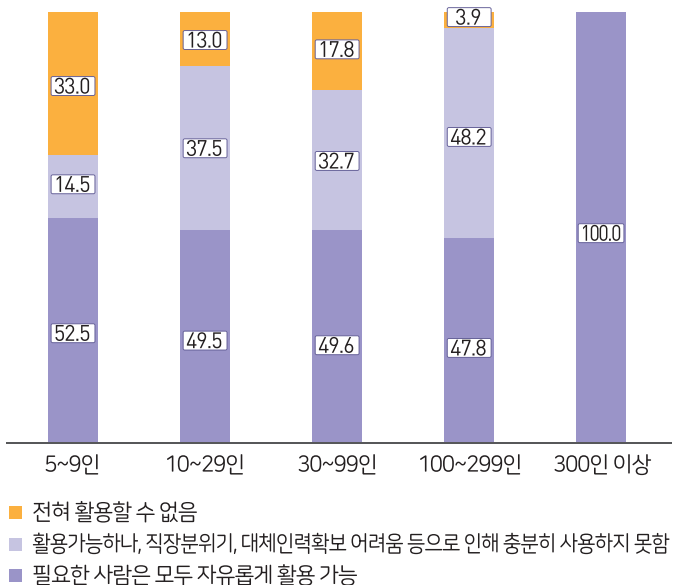
### (3) 충북 사업체 규모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

- 충북 사업체 규모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역시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응답자 모두가 ‘잘 알고 있다’고 응답하였고, ‘필요한 사람은 모두 자유롭게 활용 가능’하다고 응답함
  - 5~9인 사업체에서 들어본 적은 있다(27.4%), 모른다(23%)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해당 제도를 ‘전혀 활용할 수 없음’이라는 응답 역시 33%로 다른 규모의 사업체들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



자료 : 2021년 일·가정양립실태조사(2022). 원자료 분석.

[그림 8] 2021 충북 사업체 규모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인지도(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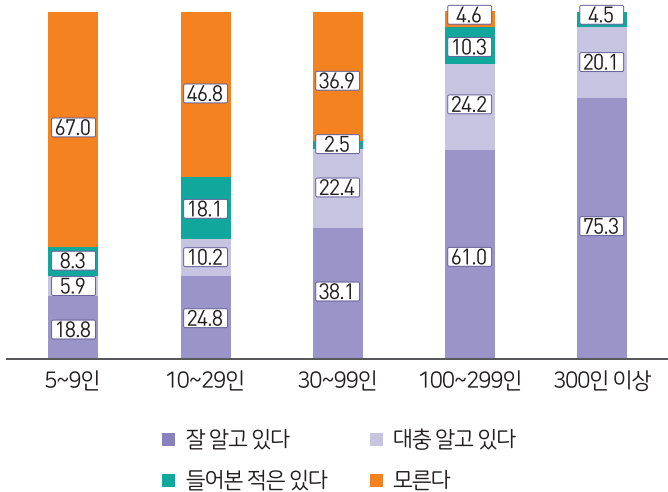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2021년 일·가정양립실태조사(2022). 원자료 분석.

[그림 9] 2021 충북 사업체 규모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가능 정도(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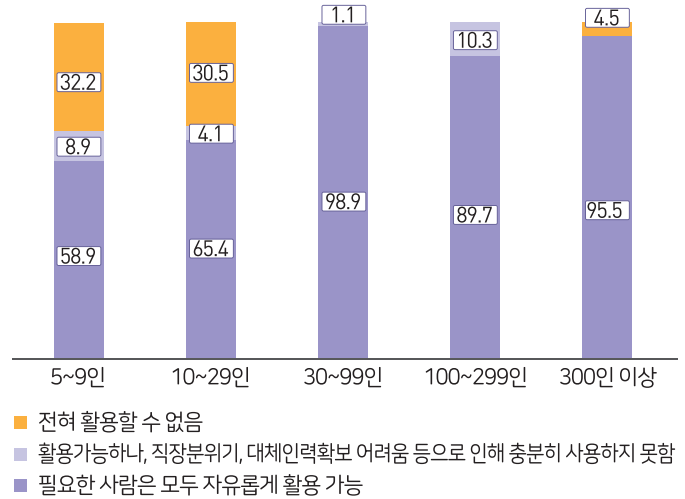
#### (4) 충북 사업체 규모별 난임휴가제도 활용

- 충북 사업체 규모별 난임휴가제도 활용에 대해서는 다른 일·가정양립제도에 비해 전반적인 사업체에서 인지도가 낮고,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‘전혀 활용할 수 없다’는 응답이 30% 이상으로 확인됨
  - 난임휴가제도에 대해 5~9인 사업체의 경우 과반 이상 ‘모른다(67%)’고 응답하였으며, 10~29인 사업체에서도 46.8%, 30~99인 사업체에서도 36.9%가 해당 제도에 대해 ‘모른다’고 응답하여 제도에 대한 인지도 개선이 시급함



자료 : 2021년 일·가정양립실태조사(2022). 원자료 분석.

[그림 10] 2021 충북 사업체 규모별 난임휴가제도 인지도(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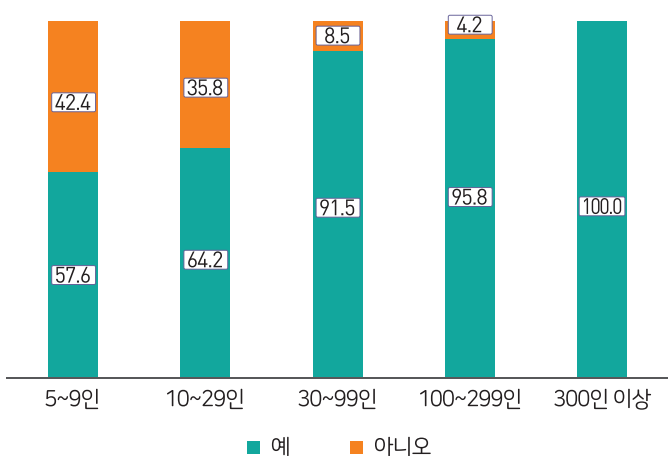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2021년 일·가정양립실태조사(2022). 원자료 분석.

[그림 11] 2021 충북 사업체 규모별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활용가능 정도(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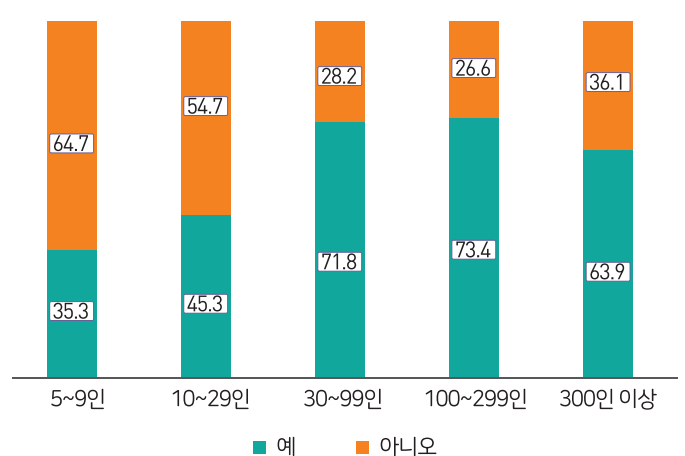
#### (5) 충북 사업체 규모별 기타(임신 출산 및 생식기 건강 관련)제도 활용

- 충북 사업체 규모별 태아검진시간 보장과 수유시설 및 수유시간 제공 정도를 확인한 결과, 5~9인 사업체에서 태아검진시간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응답은 42.4%로 다른 사업체에 비해 가장 많았고, 10~29인 사업체의 경우 35.8%가 보장받지 못한다고 응답하여 그 다음으로 많았음
- 수유시설 설치 및 수유시간 제공에 관하여서는 전반적인 사업체에서 보장받지 못한다는 응답이 도출되었는데,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과반이 ‘아니오’라고 응답하여, 이에 대한 지원방안이 요구됨



자료 : 2021년 일·가정양립실태조사(2022). 원자료 분석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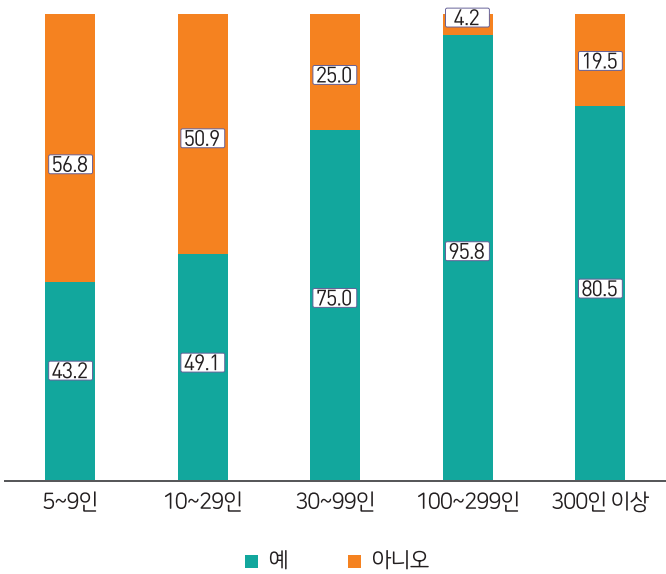
[그림 12] 2021 충북 사업체 규모별 태아검진시간 보장(%)



자료 : 2021년 일·가정양립실태조사(2022). 원자료 분석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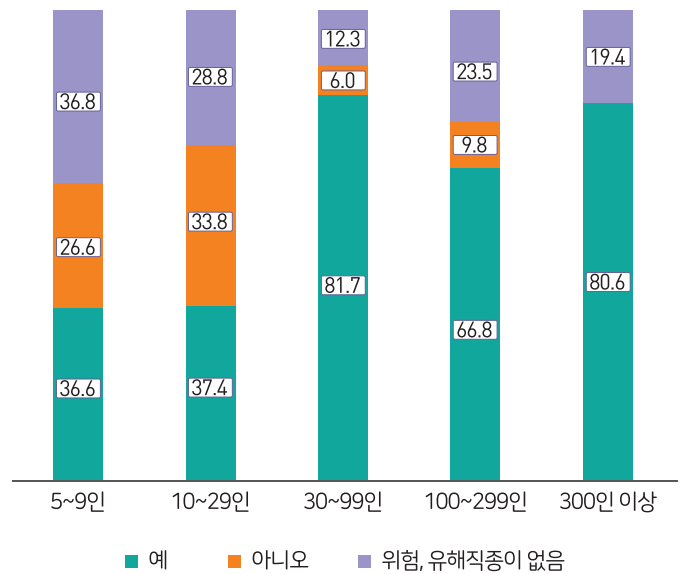
[그림 13] 2021 충북 사업체 규모별 수유시설 설치 및 수유시간 제공(%)

- 충북 사업체 규모별로 임신기 여성에 대한 지원제도 활용 수준을 확인한 결과, 30인 미만 사업체에서 특히 출산 후 시간 외 근로 금지, 야간·휴일근로의 제한 부분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
  - 임신 중 쉬운 근로로 전환하는 것에 관해 5~9인 사업체는 56.8%, 10~29인은 50.9%가 '아니오'라고 응답하였으며, 30~99인에서도 25%, 300인 이상에서도 19.5%가 '아니오'라는 응답이 도출되어 해당 제도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
  - 반면, 시간 외 근로 금지, 야간·휴일근로의 제한과 관련하여서는 다른 규모의 사업체에 비해 30인 미만 사업체에서만 '아니오'라는 응답이 많아 30인 미만 사업체에 초과근로 및 휴일 근로에 대한 지원 방안이 요구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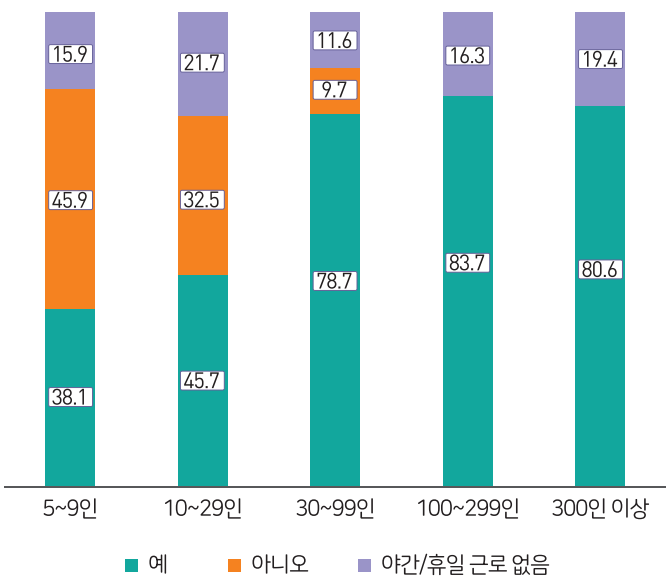
자료 : 2021년 일·가정양립실태조사(2022). 원자료 분석.

[그림 14] 2021 충북 사업체 규모별 임신 중 쉬운 근로로 전환(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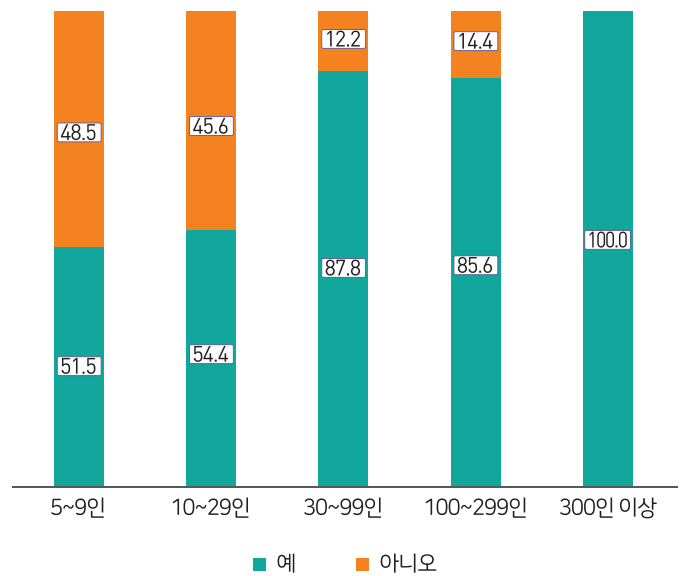
자료 : 2021년 일·가정양립실태조사(2022). 원자료 분석.

[그림 15] 2021 충북 사업체 규모별 임신 중 위험·유해업종 근무 금지(%)



자료 : 2021년 일·가정양립실태조사(2022). 원자료 분석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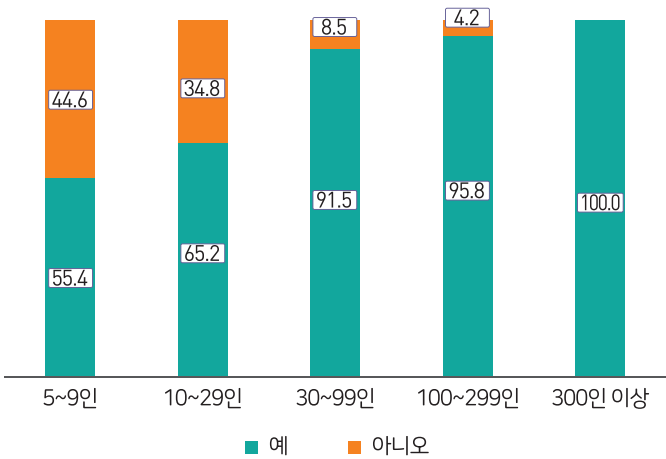
[그림 16] 2021 충북 사업체 규모별 임신 중 야간·휴일 근로의 제한(%)



자료 : 2021년 일·가정양립실태조사(2022). 원자료 분석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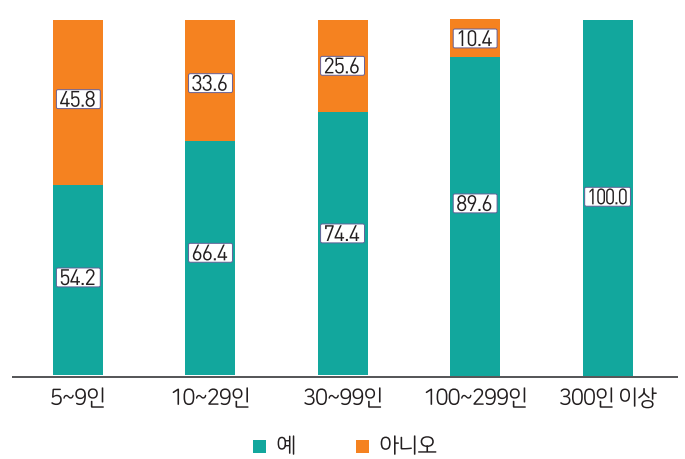
[그림 17] 2021 충북 사업체 규모별 출산 후 시간외근로 금지(%)

- 충북 사업체 규모별 유산·사산휴가 및 생리휴가의 경우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취약한 것이 확인됨
  - 유산·사산휴가 보장에 대해 '아니오'라는 응답이 5~9인의 경우 44.6%, 10~29인에서 34.8%로 확인되어 이에 대한 대안마련이 요구됨
  - 생리휴가 보장에 대해서는 '아니오'라는 응답이 5~9인의 경우 45.8%로 가장 취약하였고, 10~29인이 33.6%, 30~99인이 25.6%, 100~299인이 10.4%로 확인되어 유산·사산 휴가에 비해 300인 이상 대기업을 제외한 전반적인 사업체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음



자료 : 2021년 일·가정양립실태조사(2022). 원자료 분석.

[그림 18] 2021 충북 사업체 규모별 유산·사산휴가 보장(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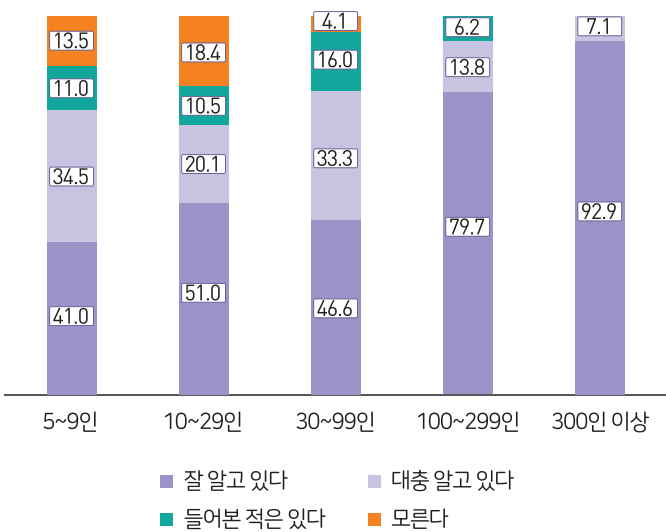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2021년 일·가정양립실태조사(2022). 원자료 분석.

[그림 19] 2021 2021 충북 사업체 규모별 생리휴가 보장(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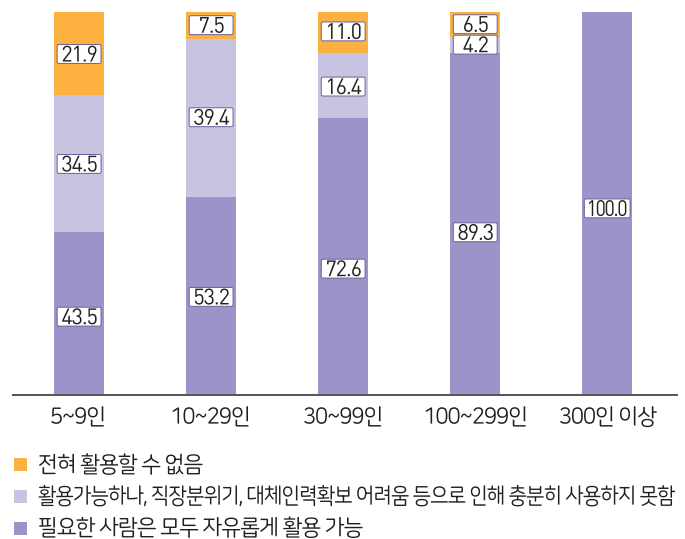
### (6) 충북 사업체 규모별 육아휴직제도 활용

- 충북 사업체 규모별 육아휴직제도 활용 수준을 확인한 결과, 상대적으로 10~29인 사업체에서 '모른다'는 응답이 18.4%로 많았으며, 5~9인 사업체에서 '전혀 활용할 수 없음'이라는 응답이 21.9%로 확인되어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홍보 확대 및 활용 보장에 대한 방안 마련이 요구됨



자료 : 2021년 일·가정양립실태조사(2022). 원자료 분석.

[그림 20] 2021 충북 사업체 규모별 육아휴직제도 인지(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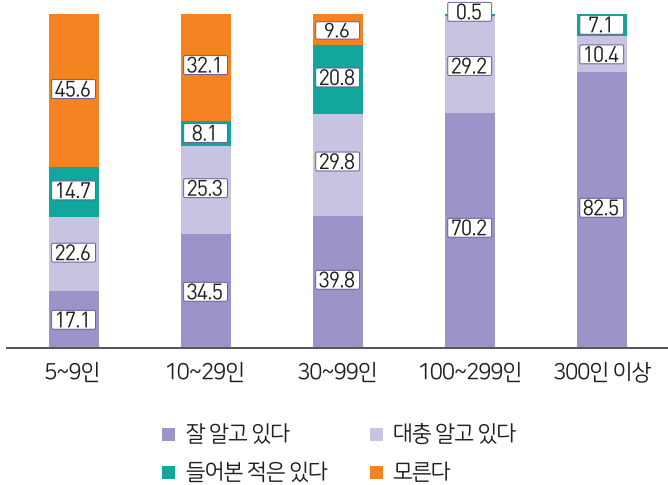
자료 : 2021년 일·가정양립실태조사(2022). 원자료 분석.

[그림 21] 2021 충북 사업체 규모별 육아휴직제도 활용가능 정도(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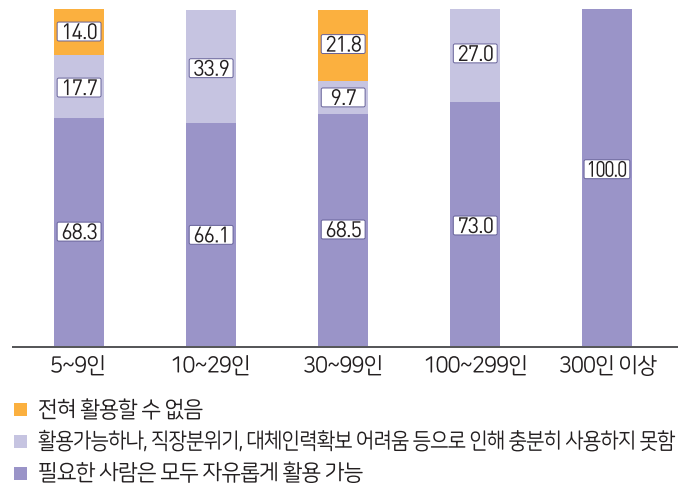
### (7) 충북 사업체 규모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

- 충북 사업체 규모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 수준을 확인한 결과, 5~9인 사업체의 경우 45.6%가 해당 제도를 '모른다'고 하였으며, 10~29인 사업체는 32.1%가 '모른다'고 응답하여 다른 규모의 사업체들과 20%p 이상 격차가 확인됨
- 반면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 가능 정도는 30~99인에서 '전혀 활용할 수 없음'이 21.8%로 나타나 가장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었고, 그 다음으로 5~9인 사업체에서 '전혀 활용할 수 없음'이라는 응답이 14% 확인됨. [그림 21]과 비교해볼 때, 5~9인 사업체에서 육아휴직제도에 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이 더 자유로운 것을 알 수 있음



자료 : 2021년 일·가정양립실태조사(2022). 원자료 분석.

[그림 22] 2021 충북 사업체 규모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인지도(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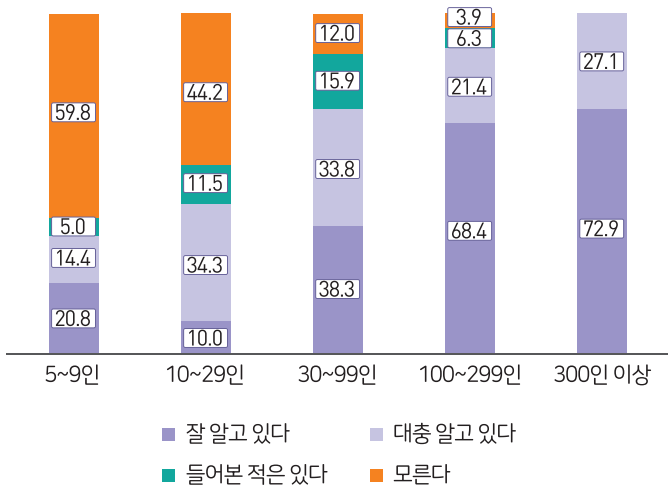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2021년 일·가정양립실태조사(2022). 원자료 분석.

[그림 23] 2021 충북 사업체 규모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 가능 정도(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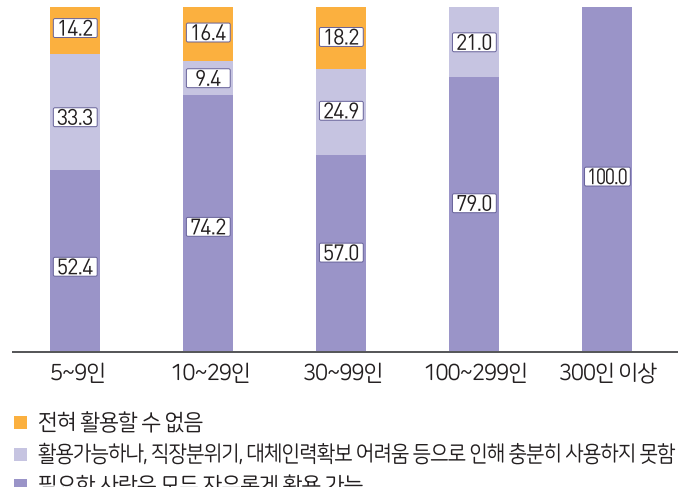
### (8) 충북 사업체 규모별 가족돌봄 휴직 휴가제도 활용

- 충북 사업체 규모별 가족돌봄 휴직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확인한 결과 5~9인은 59.8%가 '모른다', 10~29인은 44.2%가 '모른다'고 응답하여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해당 제도에 대한 홍보가 요구됨
- 해당 제도 활용 가능 정도는 5~9인에서 '필요한 사람은 모두 자유롭게 활용 가능'하다는 응답이 52.4%로 다른 사업체들에 비해 가장 적은 응답 비율을 보였음



자료 : 2021년 일·가정양립실태조사(2022). 원자료 분석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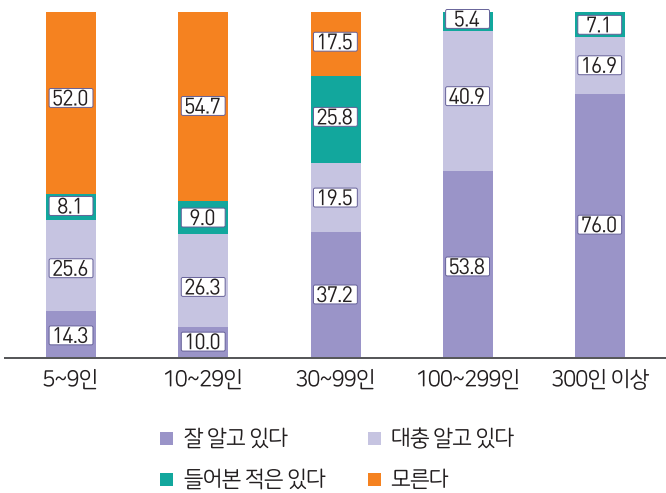
[그림 24] 2021 충북 사업체 규모별 가족돌봄 휴직제도 인지도(%)



자료 : 2021년 일·가정양립실태조사(2022). 원자료 분석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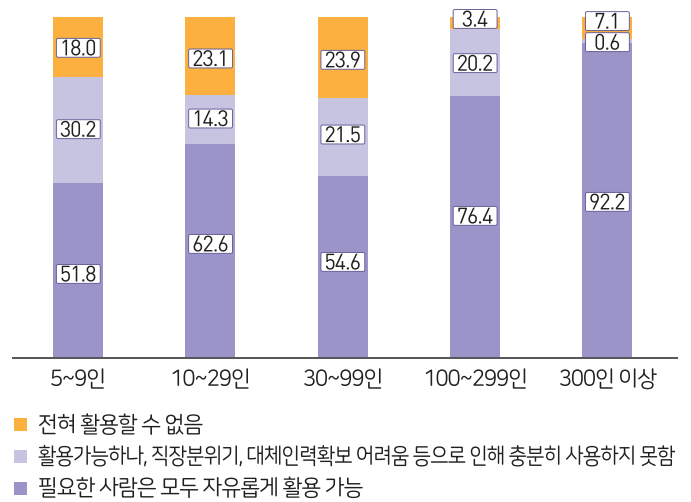
[그림 25] 2021 충북 사업체 규모별 가족돌봄 휴직제도 활용 가능 정도(%)

- 가족돌봄 휴가제도 역시 5~9인 사업체는 52%, 10~29인 사업체는 54.7%가 ‘모른다’고 응답하여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해당 제도에 대한 홍보와 안내가 요구됨



자료 : 2021년 일·가정양립실태조사(2022). 원자료 분석.

[그림 26] 2021 충북 사업체 규모별 가족돌봄 휴가제도 인지도(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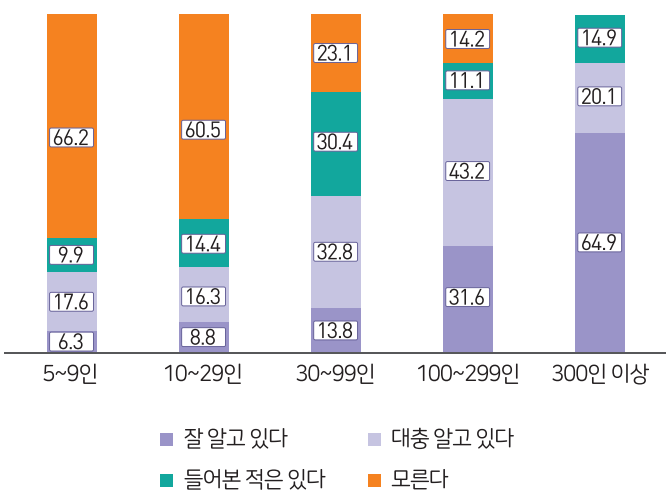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2021년 일·가정양립실태조사(2022). 원자료 분석.

[그림 27] 2021 충북 사업체 규모별 가족돌봄 휴가제도 활용 가능 정도(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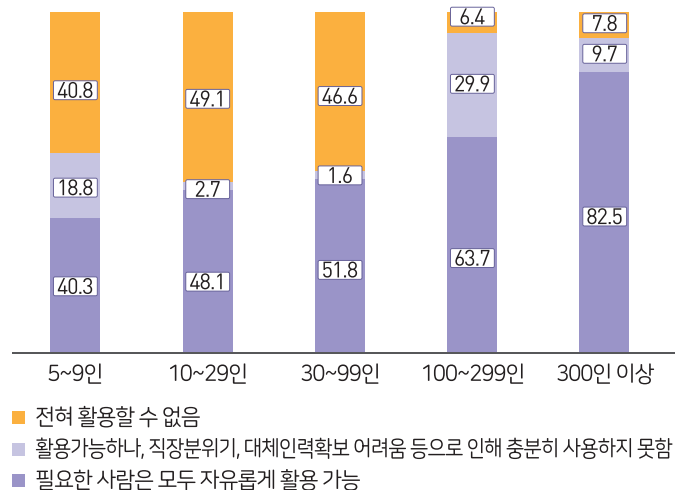
### (9) 충북 사업체 규모별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축제도 활용

-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축제도란, “근로자가 가족 돌봄, 본인 건강, 은퇴 준비, 학업을 위해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<sup>1)</sup>”를 말함
- 해당 제도 인지도에 대해 확인한 결과, 5~9인 사업체는 66.2%, 10~29인은 60.5%가 ‘모른다’고 응답하여 가족돌봄휴직·휴가·근로시간단축제도에 대한 안내와 홍보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
- 해당 제도 활용 가능 정도를 확인한 결과,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‘필요한 사람은 자유롭게 활용 가능’하다는 응답비율이 높았으나, 5~9인(40.8%), 10~29인(49.1%), 30~99인(46.6%) 사업체에서 ‘전혀 활용할 수 없다’는 응답비율도 높아 해당 제도 활용에 대한 안내 및 홍보 강화가 요구됨



자료 : 2021년 일·가정양립실태조사(2022). 원자료 분석.

[그림 28] 2021 충북 사업체 규모별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축제도 인지도(%)



자료 : 2021년 일·가정양립실태조사(2022). 원자료 분석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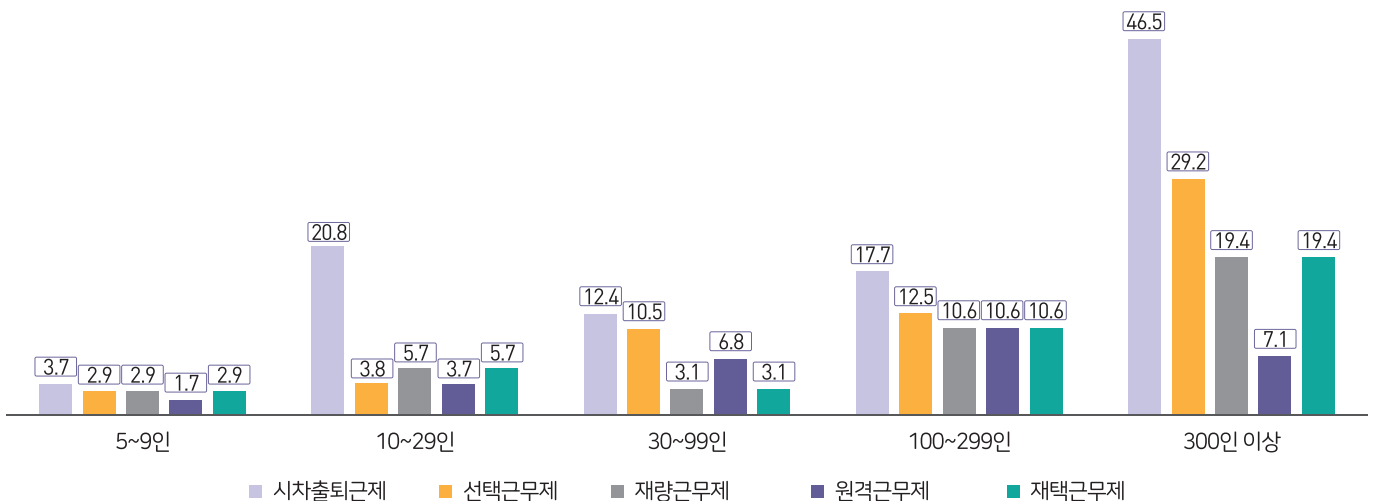
[그림 29] 충북 사업체 규모별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축제도 활용 가능 정도(%)

1) 전기택 외, 2022. 『2021년 일·가정 양립 실태조사』 조사표. 10쪽

## 2) 충북 사업체 규모별 유연근무제도 및 근무혁신제도 활용

### (1) 충북 사업체 규모별 유연근무제도 활용 정도

- 충북 사업체 규모별 유연근무제 도입 정도를 확인한 결과, 전반적인 사업체에서 시차출퇴근제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었으며, 상대적으로 100인 이상 중소기업과 대기업에서는 시차출퇴근제를 비롯한 선택근무제, 재량근무제, 원격근무제, 재택근무제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됨
  -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제도는 시차출퇴근제였으며, 원격근무제를 제외한 모든 유연근무제도 도입이 약 20%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
  - 30~99인, 100인~299인 사업체에서도 다양한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하고 있었으며, 10인~29인 사업체의 경우 시차출퇴근제(20.8%)를 중심으로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하고 있었음
  - 반면, 5~9인 사업체의 경우 다른 규모의 사업체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시차출퇴근제도를 도입한 곳도 3.7%에 불과하여, 전반적으로 유연근무제 도입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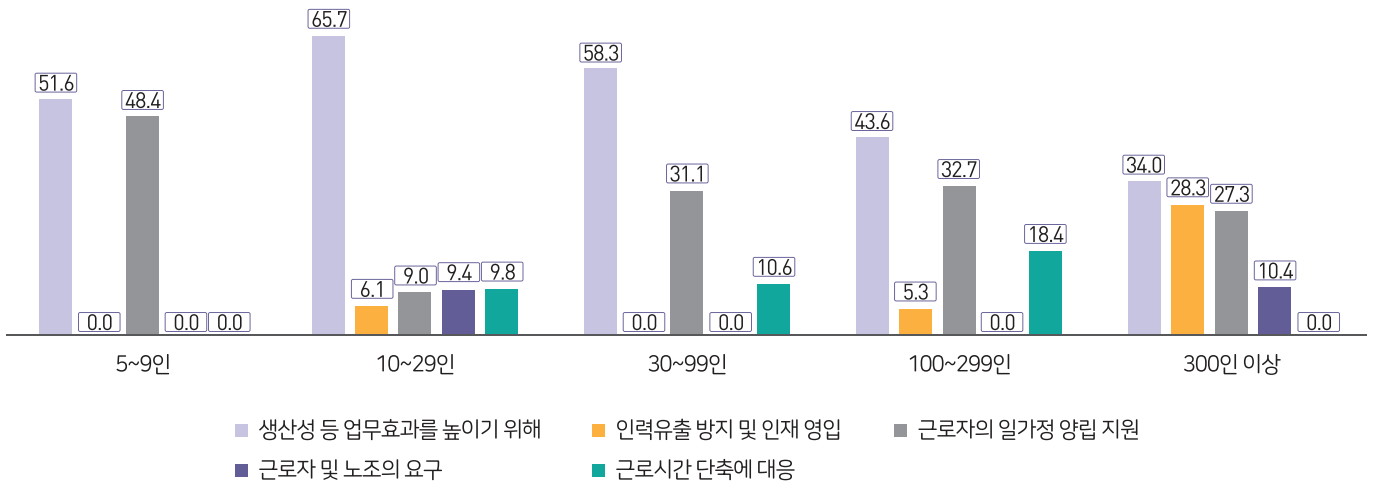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2021년 일·가정양립실태조사(2022). 원자료 분석.

[그림 30] 2021 충북 사업체 규모별 유연근무제도 도입(%)

- 충북 사업체 규모별로 유연근무제 도입한 배경을 확인한 결과, '생산성 등 업무효과를 높이기 위해' 도입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, 그 다음으로 '근로자의 일·가정 양립 지원'을 위해 도입했다는 응답이 많았음
  - '근로자의 일·가정 양립 지원'을 위해 도입했다는 응답은 5~9인 사업체에서 48.4%로 다른 규모의 사업체에 비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고, '인력유출 방지 및 인재 영입' 때문에 도입했다는 응답은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됨

- '근로시간 단축에 대응'하기 위하여 유연근무제를 도입했다는 응답의 경우, 100~299인 사업체가 18.4%, 30~99인 사업체가 10.6%, 10~29인 사업체가 9.8% 응답한 것으로 확인되어, 중소기업이 주52시간제와 관련하여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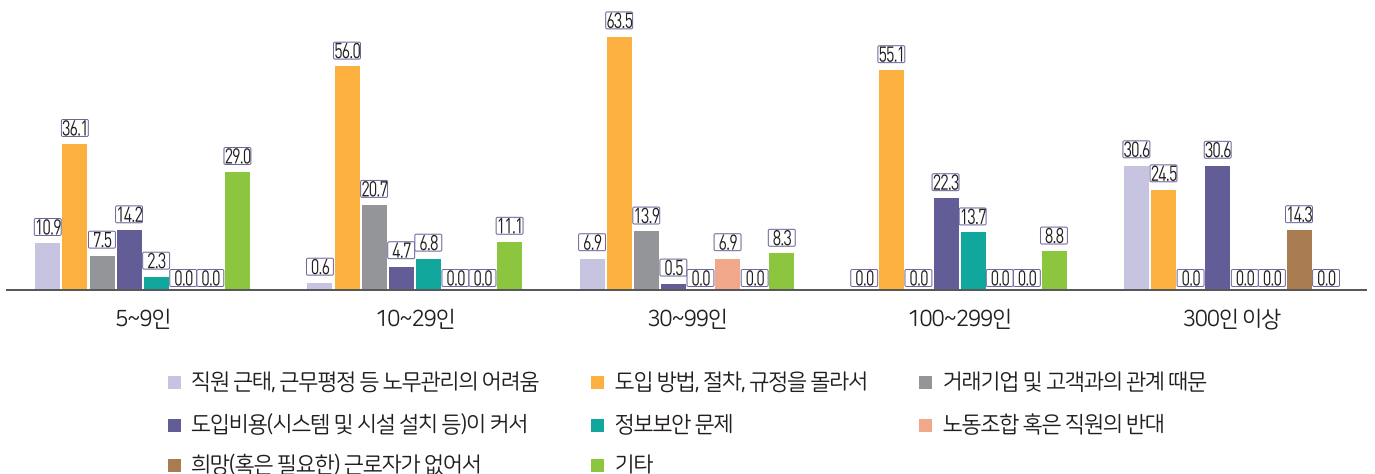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2021년 일·가정양립실태조사(2022). 원자료 분석.

[그림 31] 2021 충북 사업체 규모별 유연근무제도 도입 배경(%)

• 유연근무제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미실시 이유를 확인한 결과, 300인 이상 사업체를 제외한 모든 사업체에서 '도입 방법, 절차, 규정을 몰라서' 도입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나, 제도 홍보 강화 및 일·생활균형제도 도입에 관한 컨설팅 지원이 요구됨

-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유연근무제도 미실시 이유로 '직원 근태, 근무평정 등 노무관리의 어려움', '도입비용(시스템 및 시설 설치 등)이 커서'라는 응답이 각각 30.6%로 가장 많았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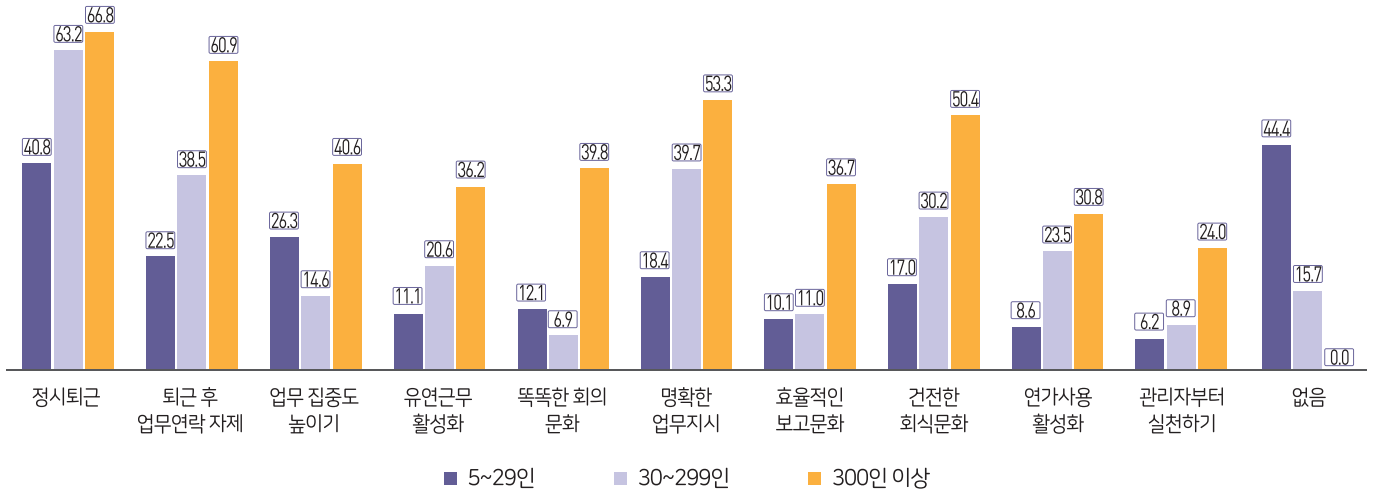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2021년 일·가정양립실태조사(2022). 원자료 분석.

[그림 32] 2021 충북 사업체 규모별 유연근무제 미실시 이유(%)

## (2) 충북 사업체 규모별 근무혁신제도 활용 정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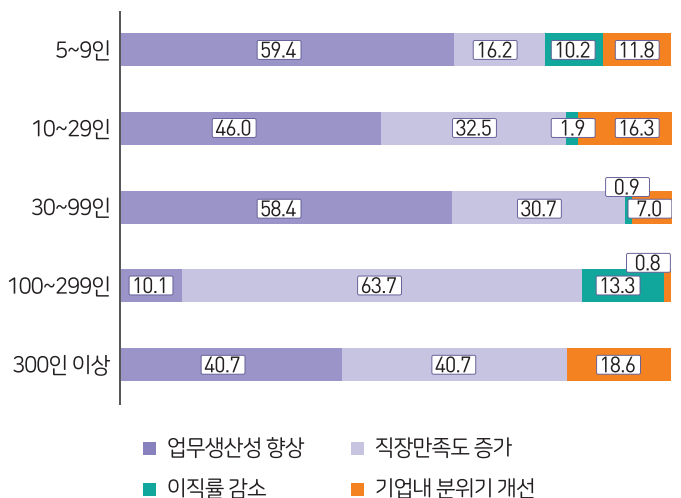
- 충북 사업체 규모별 10대 근무혁신제도 시행여부를 확인한 결과, 모든 규모의 사업체에서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는 것이 '정시퇴근'이었으며, 다른 규모의 사업체에 비해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'퇴근후 업무연락 자제(60.9%)', '명확한 업무 지시(53.3%)', '건전한 회식문화(50.4%)'를 시행하고 있다는 응답비율이 높은 편이었음



자료 : 2021년 일·가정양립실태조사(2022). 원자료 분석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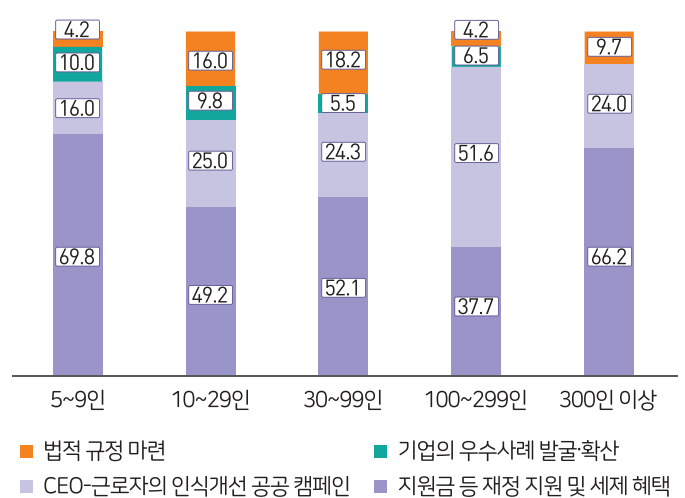
[그림 33] 2021 충북 사업체 규모별 10대 근무혁신제도 시행 여부(중복, %)

- 충북도내 사업체별 10대 근무혁신 추진 이후 가장 큰 변화는 '업무생산성 향상', 근무혁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지원은 '지원금 등 재정지원 및 세제 혜택'으로 확인됨
  - 근무혁신 추진 이후 가장 큰 변화로 전반적인 사업체 규모에서 '업무생산성 향상'이 되었다는 응답이 도출됨. 단, 100~299인 규모의 사업체에서는 '직장만족도 증가(63.7%)'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
  - 근무혁신 추진과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정부지원 1순위는 100~299인 사업체를 제외한 모든 사업체에서 '지원금 등 재정 지원 및 세제 혜택'이었으며, 'CEO-근로자의 인식개선 및 공공캠페인'이라는 응답이 그 다음으로 많았음



자료 : 2021년 일·가정양립실태조사(2022). 원자료 분석.

[그림 34] 2021 충북 사업체 규모별 근무혁신 추진 이후 가장 큰 변화(%)



자료 : 2021년 일·가정양립실태조사(2022). 원자료 분석.

[그림 35] 2021 충북 사업체 규모별 근무혁신제도 관련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(%)

## 4. 충북도내 사업체 규모별 일·생활균형제도 활용 지원 방향

- 30인 미만 사업장의 일·생활균형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취약하여 제도에 대한 안내 및 홍보 강화가 요구됨
  -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출산휴가전후제도, 배우자 출산휴가제도,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, 육아휴직제도를 제외하고는 모른다는 응답이 약 30%~70%에 달하여 이외의 일·생활균형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취약한 편임
  - 조직에서 해당 제도를 도입하고,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인사담당자의 인지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·생활 균형 제도 안내 및 홍보 강화가 시급한 실정임
- 사업체 규모별 특성을 고려하여 노동자의 권리로서 일·생활 균형제도 활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컨설팅 또는 지원 방안 마련이 요구됨
  - 휴직제도의 경우에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,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상대적으로 100인 이상 사업체들의 ‘활용가능하나, 직장분위기, 대체인력 확보 어려움 등으로 인해 충분히 사용하지 못함’ 응답 비율이 높은 편이었음
  -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에서는 유산·사산휴가 및 생리휴가 보장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음
- 1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체에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규모의 사업체들에 비해 유연근무제도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, 5~9인 사업체의 경우 전반적인 유연근무제 도입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어, 유연근무제도 도입에 관한 홍보와 맞춤형 컨설팅, 지원방안 마련이 요구됨
  - 300인 미만의 사업체 전반에서 유연근무제를 미실시하는 이유로 ‘도입 방법, 절차, 규정을 몰라서’라는 응답이 절대적으로 많은 것을 감안, 이에 대한 안내 및 컨설팅 등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
- 10대 근무혁신을 추진한 사업체 대다수가 추진 이후 업무생산성이 향상되는 변화가 있었다는 응답이 많았고, 근무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 ‘지원금 등 재정 지원 및 세제 혜택’과 ‘CEO-근로자의 인식개선 및 공공캠페인’에 대한 응답이 많았음. 이를 고려하여 충북도내 사업체들의 일·생활균형제도 활용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됨